

오늘부터 대정부질문...경제·외교·안보 전방위 격돌

與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성과 점검·도약 뒷받침

野 국정 전만 파상공세...‘용혜인·김승원’ 낙마 정조준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7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면서 여야가 경제, 외교·안보 이슈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지연시키며 주택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진용 구성에도 공을 들였다. 법무부 대상 대정부질문에 박지원 의원 등 경륜 있는 중진을 배치해 야당 공세를 차단하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출신 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정부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파상공세에 나

설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롤러코스터(코스피의 단기간 급등락 장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조목조목 따지려 버리고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과 범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정부를 향해 공세를 벌이는 이례적인 광경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어 ▲14일 김성수 대법관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등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8·30 개각 인사 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기에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추석 직전에 일정을 진행해 청문회에서 벌어진 검증 열기를 명절 여론에 고스란히 반영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후보자 가운데 초기 전선은 용혜인·김승원 후보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공세의 초점을 이른바 이중삼중 특혜론, 당 사유화 논란 등을 받는 용 후보자에 게서 김 후보자로 점점 이동시키고 있다.

용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커지자 신의임 상시령 승인 청탁 의혹을 연결고리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인 김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는 양상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답을 정해 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주시하면서 후보자 본인의 판단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김진수 기자



민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의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 받았으며 한 의원의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민주 교육특별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이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과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교육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밝혔다.

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당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김민석 당대표와 함께 교육 개혁을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재난·사고 피해자 건강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

전진숙, 장기 의료·건강지원 3개 패키지 법안 발의

“피해자 일상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기반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은 6일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현행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등에 대한 의료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지원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의료 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28일까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의료 지원금은 2034년 12월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참사로 인한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트

라우마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어 일률적인 지원 기간 제한으로는 피해자의 장기적인 치료와 회복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두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개별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 이후 피해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기상황 종료 이



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신체적 후유증이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위기상황 종료 이후에도 피해 국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에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재활,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과 주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참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에 오랫동안 흔적을 남긴다”며 “국가의 책임 역시 정해진 지원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과 보건의료 위기에서도 피해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안”이라며 “참사 이후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건강검진

매일체크✓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CMYK

+